

[청구인] □□□

[피청구인] △△구청

[주문] 청구인의 청구를 「기각」 한다.

[청구취지] 피청구인이 ○○○○. ○○. ○○. 청구인에게 한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사업정지처분」을 취소한다.

이 유

1. 사건개요

청구인은 인천광역시 ○구 ○○○○○○○○길 ○(○○동)에 위치한 ‘○○○○○ ○’를 운영하는 자로 ○○○○. ○○. ○○. 한국석유관리원 ○○○○○○본부에서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시료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(등유 등)이 약 5% 혼합되어 가짜석유로 판명됨에 따라 ○○○○. ○○. ○○.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.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○○○○. ○○. ○○.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29조 위반을 사유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고 ○○○○. ○○. ○○. 사업정지 45일(○○○○. ○○. ○○. ~ ○○. ○○.)을 처분(이하 ‘이 사건 처분’이라 한다)하였다.

2. 청구인 주장

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

청구인은 탱크로리 1대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영업하던 중 등유에 경유 성분이 섞여 소비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일이 있어 이 사건 단속 15일 전쯤 탱크로리 1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등유와 경유를 각각 저장·판매하였다. 품질검사를 받을 당시 청구인의 직원이 등유 운반용 탱크로리에 경유 1,000ℓ를 구입·저장하는 바람에 이 차량 바닥에 남아 있던 등유와 섞였을 가능성이 있다고

추측할 뿐,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.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등유와 경유를 1:1의 비율로 혼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혼합 비율이 5% 정도로 경유 1,000ℓ에 등유 5%를 혼합할 경우 얻는 시세 차익은 26,000원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이익을 얻기 위해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등유를 혼합할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므로 취소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.

3. 피청구인 주장

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

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경우 다른 석유제품 혼합비율이 5%부터 95%까지 다양하고 최근에는 소비자가 제품의 이상 유무 등을 모르게 하기 위해 5% 정도의 등유 등을 섞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있다. 또한 행정제재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성 및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. 평소 직원 및 차량 관리·감독을 소홀히 한 점, 사업정지 3개월에서 사업정지 45일로 감경 처분 받은 점,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·타당하다.

4. 이 건 처분의 위법·부당 여부

가. 관계법령
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3조, 제29조
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6조 [별표1]

나. 사실관계

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1)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○구 ○○○○○○○○길 ○(○○동)에 위치한 ‘○○○○○○’를 운영하는 자이다.

2) ○○○○. ○○. ○○. 한국석유관리원 ○○○○○본부에서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시료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(등유 등)이 약 5% 혼합되어 가짜석유로 판명되었고 ○○○○. ○○. ○○.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.

3) 위 2)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○○○○. ○○. ○○.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29조 위반을 사유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고 ○○○○. ○○. ○○. 사업정지 45일(○○○○. ○○. ○○. ~ ○○. ○○.)을 처분하였다.

다. 판 단

1)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,

가)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·수입·저장·운송·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8호에서 석유판매업자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·수입·저장·운송·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[별표1] 2. 개별기준에 따라 1회 위반인 경우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나) 아울러,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6조[별표1] I. 일반 기준 라목에 의하면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, 위반의 내용,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,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, 5년 이상 석유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 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.

2)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·부당여부를 살펴보면,

가)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주의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업소의 책임자로서 이 사건 위반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의 법규 위반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.

나) 청구인의 주장대로 품질검사를 받을 당시 청구인의 직원이 등유 운반용 탱크로리에 경유 1,000ℓ를 구입·저장하는 바람에 이 차량 바닥에 남아 있던 등유와 섞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할 뿐,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등유를 혼합할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탱크로리의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 등이 약 5% 혼합되어 가짜석유제품으로 판명된 이상 석유판매업자로서 청구인에게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석유판매업자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 행위는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차원에서도 엄정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, 피청구인이 관계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사업정지 45일 처분으로 감경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.

5. 결 론

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.